

전남대·조선대병원 총파업 움직임 속 동네병원 휴진 촉각

광주·전남의사회, 개인병원 60% 달해 18일 휴진 자율적 의사에 맡겨 시·도, 진료·휴진 신고 행정명령...시민 "동네병원도 문 닫으면 어쩌나"

대한의사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일부 개인의들까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총파업(집단휴진)이 우려되는데다 비록 자율휴진이지만 개인의들까지 가세하면 전방위적인 의료 공백이 예상된다.

11일 광주시·전남도의사회는 18일 의협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진 참가 여부를 맡기는 대신 적극 참여는 권장하기로 했다.

광주시의사회에 소속된 회원은 약 3400명이고, 전남도의사회 소속 회원도 3000여명에 달한다.

전체 회원의 60%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나머지 40%는 2·3차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의 휴진 참여의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가 일방적인 행보에 반발하는 개인의들의 많아 일정수준 이상이 휴진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반면, 개인의

들은 자영업으로 하루만 쉬어도 영업손해가 크다는 점에 휴진을 하는 개인의는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구 두암동의 개인의 A씨는 "정부의 방침이 의료계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인의들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다들 의료계 선배로서 후배들을 볼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참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개인의들은 자영업으로서 하루 휴진의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도.

광주시 동구의 한 개인의 B씨는 "동네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하루만 문을 닫아도 손해가 크다"며 "고물가에 인건비도 오르고 월세 등 고정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쉽게 휴진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총파업(집단 휴진) 당시 개인의들의 휴진 동참율이 많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의견에 한류하고

있다.

개인의들의 자율휴진을 선택했지만 광주시·전남도의사회는 의협 주도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 참석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시의사회는 총궐기대회에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지만 뜻을 같이하는 회원을 위해 모일 수 있는 별도 장소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 동구와 서구에 있는 호텔 가운데 한 곳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장에서는 여의도 현장 모습을 생방송 송출하고 연대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전남의사회는 따로 집결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서울 총궐기대회에 집중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협이 예고한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각 병원에 진료 및 휴진 신고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전담했다.

정부는 개인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날 13일까지 신고를 의무화 했다.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상급병원이 필수 진료의에 진료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개인의들까지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울의대 교수와 대한의사회(의협)의 집단휴진 계획 발표에 이어 전국의과대학수협의회(전교협) 등이 동참 여부를 논의하기 하는 등 의정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광주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아동학대 항소심 판결 2제

"던져 버리겠다" 한살 아들 상습학대...친모 징역형

한 살배기 아들을 배란다 창문너머로 "던져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수차례 학대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흥)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당시 한 살이었던 아들이 칭얼대며 배란다 창문을 열고 던질 것처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2022년 주거지 등지에서 아이가 보편하며 뺨을 때리거나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0월에도 술을 마신 뒤 같은 이유로 아들을 바닥에 던지고 뺨을 9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벗어난 아동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아 아동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A씨가 부모교육을 받는 등 제반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시 어기고 짜증 낸 학생에 욕설...교사 선고유예

휴대전화를 가방에 보관하라는 지시에 짜증을 내는 학생에게 욕설을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A(여·5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처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23일 광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B(10)군에게 욕설을 하고 12분간 교실 뒤에 서 있도록 벌을 주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했음에도 B군이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교사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B군에게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교사는 "화가 나 혼잣말 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 줄 몰랐다.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12분 가량 B군을 교실 뒤에 서있게 한 행위는 훈육 목적이거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죄로 봤다. 다만, "A교사의 욕설은 객관적 훈육 목적이거나 범위를 일탈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교사가 지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에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상방항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관공공사 편의 대가 뇌물 받은 전 공무원 징역형

CCTV설치업자도 벌금형

CCTV설치업자에게 관공공사 계약 등 편의제공을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전 화순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청 공무원 A(52)씨와 CCTV설치업자 B(67)씨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광주시 남구 한 식당에서 만나 화순군청에서 발주하는 CCTV 장비 계약과 관리·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현금 300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20일 까지 화순군 CCTV통합관제센터 서스텝 구축 및 유지관리, 예산 및 서무, CCTV 분배서버·소프트웨어 관리 등 직무를 담당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CCTV와 통신 장비설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CCTV관련 설비 계약과 유지보수 용역 등 다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군은 뇌물수수와 관련해 A씨를 파면 징계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공무원행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해임처리된 점, B씨의 경우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 영웅 1호' 안병하 치안감 유족 정부 상대 5·18정신적 손해 일부 승소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와 강경 진압을 거부한 '경찰 영웅 1호' 안병하(1928-1988) 치안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5·18유공자 정신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정용호)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족은 총 4억 4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2억 5000만원을 인용하고 상속비율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25일 이희성 계엄사

령관의 강경 진압 요구에 "경찰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안 치안감은 직위해제된 이후 보안사령관으로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숨졌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서 제직하던 안 치안감은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유훈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정부는 안 치안감을 보직해야 하고 강제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적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 : 법원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아파트]						
2024타경 1161	1	광산구 풍영로329번길19, 205동 11층 1104호 [장덕동,수원지구호반베르디움2차아파트] 84.9462㎡	아파트	489,000,000	489,000,000	
2024타경 62517	1	북구 첨단연선로217, 109동 2층 201호 [신용동,첨단2지구동흥에스-클래스] 106.7627㎡	아파트	692,000,000	692,000,000	
2024타경 64124	1	북구 대자실로23, 101동 20층 2001호 84.3㎡	아파트	245,000,000	245,000,00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3타경 9649	1	남구 임암동 869 제2층 제202호 171.12㎡ [김정경가사청부민집합건축물대장및남구청사실조희신상위권건축물,이행강제금과과금상환(청부민사실조희신상환조)]	근린시설	654,000,000	654,000,000	
2024타경 1932	1	나주시 문화로164, 11층 1137호 [빛가람동,스카이센트럴] 53.7035㎡	오피스텔	274,000,000	274,000,000	
2024타경 2058	1	동구 전천로361-15, 22층 2208호 [수기동,아트시티리베라파크모아미래도] 24.8457㎡	오피스텔	118,000,000	118,000,000	
2024타경 62227	1	나주시 우정로72, 4층 419호 [빛가람동,더글래스] 140.33㎡	근린시설	301,000,000	301,000,000	
	2	나주시 우정로72, 4층 419호 [빛가람동,더글래스] 165.33㎡	근린시설	372,000,000	372,000,000	
	3	나주시 우정로72, 4층 420호 [빛가람동,더글래스] 123.05㎡	근린시설	290,000,000	290,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3타경 67096	4	광산구 수원동 368-6 115㎡ 동소 369-7 367㎡	대	1,148,758,200	1,148,758,200	일괄매각,제외외권
2023타경 70580	4	광산구 하원길 105-7 1층83.48㎡ 2층92.65㎡ 3층30.69㎡ 제외외 권	단독주택 [별첨]	1,591,295,700	1,591,295,700	소액채무포함
2024타경 1482	1	북구 동림동 44-11 415㎡ 북구 북문대로272번길 12-13 [동림동,주건축물제1층] 1층19.85㎡ 2~4층각183.07㎡ 5층104.57㎡ 제외외 권고동14.55㎡ [물건번호:1:건물기부상도로명주소북문대로272번길12-13,건축물대장상도로명주소북문대로272번길12-13(동림동)]	다가구, 오피스텔	1,591,295,700	1,591,295,700	일괄매각,제외외권
[대지/임야/전답]						
2023타경 67096	1	광산구 도천동 277-23 304㎡	전	343,520,000	343,520,000	지적도상행지
2023타경 70580	2	광산구 도천동 381 4746㎡ [김연길4738/4770 지분전부,공유지우선매수권1회제한]	답	5,376,243,540	5,376,243,540	지분매각,지상소재
	3	광산구 도천동 381-56 1226㎡	답	1,326,130,000	1,326,130,000	수목매각포함
	5	광산구 도천동 381-57 24㎡ [광구11번(주)오들4738/4770지분,광산구도천동275-26번지와10필지상건축허가특고건축]	답	47,439,610	47,439,610	지분매각,공유지우선매수권1회제한

● 공표 부동산의 연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될 때 매수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합형사정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지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 있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금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4. 6. 26.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4. 7. 3.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비추어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가매수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발행의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출 수내보거나 현금보증서(계좌)를 제출한 날이 입찰 마감일입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명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된 공판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가 매수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청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은 입찰보증금을 출납하지 않고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 매수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간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② 차순위 매수신청인(차순위매수신청인)은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매각대금 납부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실시합니다. 다만, 차순위매수신청인 차순위매수신청인의 매각대금 및 차순위매수,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허가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목세와 지방공과세를 납부한 후 등목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목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재권변환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병합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물권자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 사항
① 매각의 공고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부터 먼저 주된물권인신청을 하고 그 후 공고하고 있는 입찰자입니다. 사지등물권설정 등 인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금지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입찰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열람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등의 사본 등을 무인방문 민사집행 [신청]공고에 비치하거나 법원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예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식에 나열된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명령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부터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분증 공고의 요지는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증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재판과도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함으로써, 즉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서서 게시된 매각기일과 공고나 비추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1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